



대우조선 민영화 조선업 발전론 “새빨간 거짓말”

금속노조 “조선업 발전방안 같이 만들자” ... 산은, 현중 대주주 특혜 중단해야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1월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조선업은 업황의 잦은 등락으로 불황기에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하는 산업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혈세 투입과 구조조정 후 재벌에 헐값에 상납하는 ‘손실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 정책을 반복해 왔다”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상납하면 안 된다.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현대중공업과 합병 시너지효과는 전무했다”라면서 “현대재벌 체제 일원화가 기자재 업체 줄도산, 남해안 조선산업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임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와 뇌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중에 현물출자와 투자계약 기간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주며 재벌 총수의 재산 증식에 혈안이 돼 도와주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8년 대우조선 민영화 발표 이후 2020년까지 조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한국 조선업 특징에 맞춰 금속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태호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지회와 거제대책위가 함께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과 동시에 경남·거제 조선산업, 지역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라고 규탄했다.

신태호 수석부지회장은 “대우조선지회는 지역대책위와 끝까지 연대해 현중 대주주 재벌 특혜 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고, 거제 시민과 경남 주민, 대우조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재벌 특혜 매각을 강행하면, 앞으로 생길 사태 책임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있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매각저지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진짜 사장 정기선이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현중사내하청지회, 현중 본사 등 전국거점농성 돌입 ... “현대건설기계 각오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현대건설기계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 투쟁을 확대했다. 업체 위장폐업으로 일터 잃은 현대건설기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울산 현중 정문 앞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1월 25일부터 농성 거점을 서울 종로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경기 성남 현대건설기계 본사, 부산 해운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네 곳으로 확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그룹 3세인 정기선 부사장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이성호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며,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거점 농성을 시작했다” 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는 건설기계 장비를 만들었다. 지난 5월 서진이엔지 사측은 단체교섭 도중 돌연 지회에 폐업을 알렸다. 노동자 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물량감소를 내세웠다.

지회는 코로나 19 위기와 무관한

‘노조 파괴용’ 위장폐업으로 판단했다. 서진이엔지 사측은 노동자들이 2020년 2월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교감 속에 의도적으로 물량을 줄여왔다.



지회는 원청에 위장폐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2020년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 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대건설기계 관리자들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매일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대건설기계 원·하청 노동자들은 혼재된 라인 공정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했다.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한 노동부는 2020년 12월 28일 현대건설기계에게 서진이엔지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대상은 폐업 당시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던 57명 전원이다. 현대건설기계가 1월 28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호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1월 28일로 시정기한이 지났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지회장은 “사측이 정부 명령에 불복한 채 과태료와 벌금대응에 거액을 쓰고 시간 끌면서 긴 소송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2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건설기계사업 확대를 피하며 정기선 부사장 주도로 현대건설기계 동종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추진해왔다.

지회는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해결 없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았다. 서울 그룹 본사 앞 노숙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6개월 넘게 공장 밖으로 쫓겨나 싸우고 있다”라며 “원청 직접고용이 가장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지회장은 “진짜 사장 정기선을 만나기 위해 원청 본사에 올라왔다. 노동부가 우리를 정규직 노동자라고 인정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 라고 결의했다.

이 지회장은 “지난여름 태풍·무더위·폭우에도 이탈한 조합원이 없었다. 한겨울 추위를 극복하고 원청 직접고용 쟁취하겠다”라며 현대건설기계에게 경고했다.